

#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

김 광 수\*\*

1. 서 론
2. '통일' 정책과 전략 논의
3. 인민 동원
4. 전쟁 무기·물자의 생산과 수입
5. 결 론

## 1. 서 론

6·25전쟁 발발 이후 6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이 전쟁에 대한 연구 영역 중 가장 부진한 부분은 북한의 전쟁수행에 대한 연구 부분이다. 지난 60년 동안 연구자들은 남침설·북침설을 둘러싼 전쟁 책임논쟁과 전쟁 결정과정에서 스탈린과 김일성 중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논문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연구』(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년 7월)의 일부분을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주도자 논쟁 등 전쟁의 원인과 배경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커밍스는 이른바 내재적 사회혁명론을 제시함으로써 전쟁의 결정자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쟁 원인을 제시하고자 했지만<sup>1)</sup> 그는 남한과 미국의 분석에 상응하는 정도로 소련과 북한 내부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큰 오류를 범했다. 1990년대에 공개된 한국전쟁 관련 소련외교문서와 미국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노획북한문서'를 활용한 캐서린 웨더스비, 박명림, 양영조, 이완범, 정병준, 와다 하루끼 등의 연구에 의해 전쟁책임과 전쟁 주도자 문제를 중심으로 장기간 진행된 논쟁들의 대부분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전쟁의 원인 혹은 기원에 관한 문제들을 제외한다면 북한 내부의 전략논의, 전쟁 준비 과정, 전쟁 수행간의 문제들은 아직 많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1·2차세계대전사의 경우에도 영미중심의 연구시각이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소련 문서 공개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전쟁에 대한 균형잡힌 해석이 가능해졌는데,<sup>3)</sup>

---

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idem.,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8, 1993; idem., "The Soviet Role in the Korean War: The State of Historical Knowledge", in William Stueck 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II, 나남출판, 1996; 양영조, 『한국전쟁 이전 38도선 충돌 1945~1950』, 국방군사연구소, 1999;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와다 하루끼·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和田春樹(와다 하루끼), 『朝鮮戰爭』, 東京, 岩波書店, 2002.

3)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서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Norman Stone, *The Eastern Front 1914~1917*(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5); 데이비드 M. 글렌즈·조너선 M. 하우스 지음, 권도승·남창우·윤시원 옮김, 『독소전쟁사 1941~1945: 붉은 군대는 어떻게 히틀러를 막았는가』, 열린책들, 2007; Geoffrey Roberts, *Stalin's Wars: From World War To Cold War, 1939~1953*(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2006).

6·25전쟁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 미국, UN측 중심으로 편중된 연구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내부적 전쟁 준비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후 북한의 '통일' 전략과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정신적 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4)</sup>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어떠한 전략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쟁 비용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전쟁을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떠한 동원을 시행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쟁 문제를 둘러싼 소련과 북한 지도부와의 교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에<sup>5)</sup> 이 논문은 북한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쟁을 대비한 북한군(조선인민군)의 증강과 군비 확장 과정은 전쟁 동원의 주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또 다른 논문에서 독립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sup>6)</sup>

이 논문이 다루는 주요 시기는 주로 1948년 9월부터 1950년도 초까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스탈린과 김일성 간에 전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1950년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말부터 진행된 군비증강은 소련의 적극적 개입 하에 수립된 구체적인 남한침공 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전쟁을 염두에 둔 동원 체제는 북한지도부 내의 북한정부 수립 직후부터의 '통일' 논의를 거쳐 1949년에 마련되었다. 1948년 말부터 1949년 한 해 동안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에게 전쟁 동의를 거듭 촉구하면서 인민봉기를 통한 남한 체제 전복과 전쟁을 대비한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지도부는 전쟁과 남한 내부 전복의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저울질 하는 한편, 전쟁을 예상한 동원체제 확립을 위해 은밀한 준비를 진행해갔다. 당시 소련이 자신을 평화의 주창자이며 미국이

4) 박명림은 일찍이 북한이 전쟁을 위한 1949년 전개한 인민동원의 실상에 대해 상세히 다룬 바 있으나 그는 북한 내부의 전략 논의와 전쟁의 물질 준비의 실상에 대해서는 더 깊숙이 천착하지 못했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기원과 발발』 II, 제12장 참조.

5) 주2)에 제시한 연구서들을 참조.

6)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줄고,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년 7월), 61~78쪽 참조.

야말로 제국주의적 전쟁광이라고 매도하는 ‘평화공세(Peace Offensive)’를 취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해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미국과 남한에 의한 침략 위협에 대비한다는 기만적 논리를 앞세워 군비증강과 인민 동원을 시행했다. 계급혁명을 위해 선전과 기만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고 주민을 속여서라도 목표를 성취한다는 북한체제의 행동패턴은 이미 이때부터 확립되었다.

## 2. ‘통일’ 정책과 전략 논의

1948년 8월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북한지도부는 1947년 말 이래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남한 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며,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천으로 옮길 것을 새로운 정부의 정강에 못박았다. 그것은 박명림이 말했듯이, 그 동안의 ‘민주기지(民主基地)’ 노선으로부터 ‘국토완정(國土完整)’ 노선으로의 전환이었다. 새 정부의 정강에서 통일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 정강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비난하며, “이같은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중앙정부는 전조선인민들을 정부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 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되는 양군 동시철거에 대한 소련정부의 제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 언명했다. 그 방법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시행한 인민위원회 정치체,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노동법, 남녀평등권법 등 ‘민주개혁’ 조치를 남한에까지 확장하겠다는 목표만은 분명하게 밝혔다.<sup>7)</sup>

7)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중앙년감 1950년도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1.

조선노동당도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노동당 제2기 제3차전원회의가 열렸던 1948년 9월 28일 노동당은 차후의 모든 당의 활동에서 남한까지 북한의 체제를 확장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을 당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강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조선을 통일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에 예견되고 북조선에 이미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에 의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질서를 전국적으로 실천시킬 것을 우리당의 가장 절박한 급선적 과업으로 인정한다.<sup>8)</sup>

그러나 이 결정서는 동시에 통일은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 하에 남한과의 협상에 의한 통일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소한 민족주의" 경향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당중앙위원회는 협소한 민족주의적 편향이 발현되는 때에는 그것이 누구에서 발현된 여하를 불문하고 그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그의 발현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당단체들에게 책임지운다."<sup>9)</sup>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 이외의 어떤 민족주의적 통일논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sup>10)</sup> 당시의 북한의 모든 정치문제와 당의 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결정서, 『근로자』 1948년 제10호(1948년 10월), 42쪽.

9) 위의 자료, 43쪽. 여기서 허가이가 말한 "협소한 민족주의"란 민족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계급투쟁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족의 자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스탈린식 민족이론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인다. 스탈린의 민족이론에 관해서는 나라사랑 편집부 편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이론』, 나라사랑, 1989, 313~384쪽 참조.

10) 그것은 제3차 전원회의에서 허가이가 남북한체정당연석회의에 참가해 남북한의 분단정부 구성을 반대하면서 민족 중심의 남북한 협조에 의한 통일론을 제기한 김구, 김규식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김규식과 김구의 태도입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였던지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반동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하며 이러한 태도에 대한 확고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허가이,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진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선거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 『근로자』 1948년 제10호, 15쪽.

소련측으로서도 북한지도자들의 통일열망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의 채택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수립의 논의과정에서 소련 군정의 총책임자 슈티코프는 남북한 노동당이 안배를 이루면서 서로의 협력하에 북한 주도하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구상을 김일성과 박헌영과의 협의에 의해 보장하고자 했다. 소련문서에 의하면 소련 중앙에서는 최초 북한측이 주로 북노당 출신으로 구성된 정부 요직 인선안을 반송하면서 남한 출신을 대폭 기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sup>11)</sup> 이는 소련이 전 한국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북한 정부 요인의 인선을 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슈티코프는 박헌영의 이론적 수준과 남한에서 지하활동의 지도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며 그를 새롭게 통합될 남북노동당 연합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일성을 새정부의 내각 수상으로 앉힘으로써 남·북 노동당의 협력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1947년에 박헌영과 김일성간의 알력을 우려하고 있었던 슈티코프는 북한 정부 수립을 앞두고 두 사람의 협력관계를 확실히 해두고자 했다. 그는 1948년 7월 30일 김일성과 박헌영을 불러 차후의 남북한 노동당의 연합중앙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8월 3일에는 김일성을 만나 당 연합 중앙위원회에서 박헌영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sup>12)</sup> 또한 내각 구성에서도 슈티코프의 주장에 의해 각료의 숫자에서 남한 출신자들에게 10개의 상(相)의 자리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이에 대해 레베제

11)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와 이로 인한 최고인민회의, 내각의 인선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한울, 2008, 279~283쪽.

12) 국사편찬위원회, 『슈티코프 일기 1946~194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1948년 7월 30일자, 8월 3일자. 이후 1949년 6월까지의 남노당과 북노당이 통합되지 않은 채 분립해 유지되고 연합중앙위원회를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과연 슈티코프의 제안대로 박헌영이 연합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13) 북한주재 소련대사관,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1등서기관 바쉬케비치와 박창욱의 대답록」(1953년 4월 4일), “Zapis’ Beseby 1-go sekretariia Posoľstva SSSR v KNDR t. Vasiukevich V. A. s sekretarem TsK TPK Pak Chan Okom”, 문서고 분류기호 불명.

프는 “차후에 어떻게 북한정치가 돌아갈지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결국 슈티코프의 최종 결정에 의해 조각이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스탈린과 슈티코프는 그만큼 남한정권의 전복을 통한 한반도 통일 전략에 비중을 높게 두었고, 박헌영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일단 ‘북한 주도의 통일’을 노동당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을 어떻게 성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견이 존재했다. 그것은 오래전에 김점곤이 지적했듯이 박헌영의 남노당과 김일성과-소련과-연안과 연합의 북로당의 통일 전략이 달랐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해방 이후부터 오랫동안 북한 노동당의 중앙당본부에 몸담았던 신경완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신경완에 의하면 1948년 말 최용건, 강건 등 만주빨치산파와 연안파는 미군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남한 유격대활동의 강화에 의한 인민봉기를 통해 남한 자체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은 힘의 낭비에 불과하며, 인민군이 전쟁을 준비하고, 남한의 인민유격대들이 보조가 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에 박헌영은 1946년 이래 1948년 8월말까지도 “남조선혁명은 북의 일정한 원조를 받아 남노당이 주동이 되어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남노당 중심의 인민봉기론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박헌영은 이 면에 있어서는 레닌의 무장봉기론에 보다 충실한 혁명전략을 갖고 있었다. 박헌영은 1947년에 쓴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이라는 팸플릿에서 바로 그러한 그의 지론을 논술했다.<sup>16)</sup> 또한 충실한 남노당원 김달삼 등이 제주도에서 남한 단독선거

14)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김점곤, 『남노당 폭력 혁명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김철범 엮음), 평민사, 1989, 61~62쪽. 그러나 김점곤 교수는 러시아 자료를 사용하지 못해 이러한 북한 내부의 논의가 소련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15)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민연, 2002, 125~126쪽.

16) 박헌영,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 해방사, 1947. 그는 이 책 말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미(己未)’가 아니라 ‘갑오(甲午)’”라고 하여 삼일운동의 평화적 투쟁보다 동학란과 같은 무장폭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또한 동학란의 문제점으로서 근왕의식, 폭동의 전략전술 부재, 끝까지 투쟁하지 못한 것을 들며, 레닌의 “폭동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면 그것은 끝까지 나갈 것을 알아야 한다”는 구절을 언급하고 있다.

를 반대하여 일으킨 2·8, 4·3사건을 계기로 유격대투쟁을 통해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공격해 남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것이 박헌영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한편 그는 슈티코프에게도 자신의 토지개혁을 동반한 무장봉기론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1948년 9월 3일 남조선 정세에 관한 문제로 슈티코프를 만났을 때 박헌영은 남조선에서의 토지개혁 문제를 제기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해서 몰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슈티코프는 이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얻어질 최종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 하라고 충고했다.<sup>18)</sup> 아마도 슈티코프는 시기 선택에 대한 신중성을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북노당과 남노당간의 혁명전략과 주도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과 뒤이은 여순 폭동의 결과는 점점 더 북한내에서 북로당 측의 입지를 강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수 제14연대 반란사건은 제주도 유격대 활동 진압을 위해 제14연대가 파견되기 직전에 이를 거부하기 위해 남노당 세포인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에 의해 주도되어 군인 3,000명이 가담했다. 이것은 남노당의 직접적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반란지도부가 모두 이미 여수시당과의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남노당 조직은 즉시 무장폭동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10월 19일에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다음날인 10월 20일 남노당 여수시당이 지휘하여 시민을 모아 집회를 열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인민재판을 열어 우익인사들을 처형하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정책을 선포하는 등 무장봉기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4일 후부터 여수순천 반란은 이승만 정부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토벌작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내는

17) 제주도 빨치산 투쟁의 주역이자 나중에 제주도를 탈출한 김달삼은 해주 남조선 정당사회 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박헌영 선생’에 대한 최대의 존경심을 표시하며 제주도에서 인민유격대 투쟁에 관해 대표들에게 그의 경험을 소개했다. 편자 미상,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중요문헌집』, 인민출판사, 1948, 102~109쪽.

18) 『슈티코프일기』, 1948년 9월 3일자.

탄압의 칼날을 받았으며, 반란의 주동자들은 지리산 주변의 주요 산으로 들어가 '야산대'라는 이름으로 장기 유격전을 펼치게 되었다.<sup>19)</sup> 이때부터 지리산 일대에 빨치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여순반란 이후 남한 군대와 경찰이 실시한 여순반란 진압작전과 1948년 '동계토벌'에 의해 상당히 많은 당원과 빨치산들이 희생당했다.<sup>20)</sup>

제주도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이 남한 정부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순 폭동'의 실패와 이승만 정부에 의한 많은 남노당원의 처형, 투옥 사태는<sup>21)</sup> 북한 지도부내에서 남노당의 무장봉기 혁명론에 대한 많은 비판적 의견들을 표출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완에 의하면 당시 최용건과 연안파는 "현실적으로 남한에 미군이 들어와 있고 미군정 통치가 실시되고 있다. 미군정은 일제 통치기구를 그대로 받아 군정을 실시한다. 강력한 군정 통치기구 때문에 혁명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 통일과 남조선해방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혁명기지가 주동이 되고 남조선 혁명역량이 배합되는 남북 배합작전에 의해 이룩될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남조선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보존, 축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강건은 당시 남노당 중심으로 운영되던 빨치산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남노당이 주동이 되어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곤란하고 남노당이 배합하는 협동작전에 의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 혁명역량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박헌영은 곧바로 강동정치학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강건의 연설은 남노당의 노선

19) 김남식, 『남노당연구』, 돌베개, 1984, 379~389쪽;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34~184쪽.

20) 노동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는 정확한 인원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남한측에 의해 학살, 처형된 수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승민,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 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1949년 11호(6월 15일 발행), 35~39쪽. 『광주전남현대사』 2에 의하면 1949년 1~2월 사이에 1,650명의 유격대와 남노당원 4,500명이 진압군에 투항함으로써 동계토벌이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184쪽.

21) 북한측에서는 여순폭동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토벌에 의해 약 15,000명의 빨치산이 희생되었고, 일반인을 포함해 약 30,000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외무부 역, 『소련극비외교문서(3)』, 34쪽.

과 배치된다. 우리가 피흘려 싸워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2)</sup> 통일전략을 두고 남북 노동당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로당 지도부는 전쟁에 의한 통일 방안을 염두에 두고, 1948년 말부터 전쟁에 대한 이념적 무장과 실질적 준비를 은밀하게 시작했다. 그들은 1948년 12월 레닌의 정의의 전쟁론을 번역해 소개하고, 소련의 전쟁 수행 경험으로부터 전쟁준비의 기초를 삼고자 많은 전쟁관련 저작들을 번역 출판했다. 1948년 12월에는 북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적 학설』이란 제목의 팜플렛을 출판해 레닌의 정의의 전쟁론을 소개했다.<sup>23)</sup> 같은 달 김일성대학 교수들인 김광순과 조영식의 공역으로 엔 보즈네센스키의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소련의 전시경제』를 출판했다.<sup>24)</sup> 또한 다수의 소련의 전쟁관련 경험이 소개되었다. 1949년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소련의 저명역사가 민쓰의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번역 출판되었고,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은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무력』을 출판했다.<sup>25)</sup> 그 외에도 독소전쟁 전후의 스탈린과 소련공산당 활동에 관한 논문들이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소개되었다.<sup>26)</sup> 이러한 책들은 주로 당원들 사이에만 유통되었으나, 혁명적 내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의 실질적 문제들을 배우는데도 사용되었다.

22)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126쪽에서 재인용.

23) 북조선 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에 관한 맑스 레닌주의적 학설』, 평양: 로동당출판사, 1948.

24) 엔 보즈네센스키, 김광순·조영식 공역, 『조국전쟁시기에 있어서 소련의 전시경제』, 평양: 재정성경영계산연구회, 1948.

25) 이·민쓰,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역,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평양: 로동당출판사, 1949;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무력』(1949. 7).

26) 박영, 「전쟁 평화 및 혁명에 관한 불셰위크당의 리론과 진술」 『근로자』 제16호(1949년 8월); 드·자이체브,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전야에 있어서의 불셰위끼당』, 『근로자』 1949년 제19호(1949년 10월), 86~107쪽; 이·이노첸코브,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불셰위끼당』 『근로자』 1949년 제21호(1949년 11월), 79~99쪽.

1949년 초에 들어서서 남노당 게릴라의 위축된 활동으로 인해 북한지도부내에서는 점차 통일 전략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이라는 생각에는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일성은 1948년 말의 시점에는 남한에 비해 북한이 월등하게 우월한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1948년 10월말부터 그해 말까지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무기를 인민군에게 이양함으로써 탱크, 항공기 등을 보유하게 된 북한의 군대는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가 주 무기인 남한에 비해 월등한 무장의 우위를 달성하고 있었다. 병력만 보더라도 1948년 말 남한의 국군은 병력이 47,000명이었으나, 북한은 정규군만 6만명이었다.<sup>27)</sup> 여기에 북한이 38선의 국경지역에 배치한 경비대와 보안대 등은 숫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무장은 국군 정규부대에 비견할 만 했다. 김일성이 박헌영 및 각료들과 함께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해 가진 회담에서 스탈린에게 남한의 군대보다 북한의 군대가 강하다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표시한 것은 그러한 의사의 표현이었다.<sup>28)</sup> 그러나 3월 7일 김일성, 박헌영과 스탈린이 따로 갖은 회담에서 김일성은 남한을 공격해 통일할 절호의 기회이며 남한의 빨치산 부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스탈린의 전쟁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전쟁은 미국과의 38선도선 분할협정이 지켜져야 하고, 국제정치 형세로 보아도 적절치 않으며,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을 함으로써 김일성의 무력통일안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다만 남한이 먼저 공격할 때만 반격이 가능하다고 했다.<sup>29)</sup>

스탈린의 전쟁 불가의 조언을 듣고 북한에 돌아 온 북한지도부는 당장은 남한에서의 유격전 활동을 지원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일 전략에서 남한의 유격대의 성공 가능성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서는 1949년 내내 사태의 진전에 따라 북노파와 남노파 사이에

27) 정병준, 『한국전쟁』, 308, 318쪽.

28) 「소련 내각회의 의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의 조소 양국관계의 발전 전망에 관한 회담 기록, 1949년 3월 5일 20시 00분」,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군사편찬위원회, 2003, 23쪽.

29) 1949년 3월 7일의 회담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1995년 5월 15일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한 수단으로만 통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점을 이루었다. 소련대사와 김일성, 박헌영 사이의 1949년 동안의 면담 내용을 통해 볼 때 박헌영은 1949년 봄부터는 전쟁에 대해 인민군의 정규전과 빨치산 작전을 배합한다는 틀 속에서 김일성의 전쟁에 의한 통일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1949년 6월에 남북노동당의 합당을 이루어 '조선노동당'으로 개칭하고 김일성이 위원장, 박헌영과 허가이가 부위원장으로 피선되면서부터 대남전략에서 북노당 우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동안 남노당의 조직과 활동을 전담하던 박헌영은 남한에서의 남노당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독자적 재량권을 누렸다. 남노당은 1949년 4월을 '해방의 달'로 정하고 도시 폭동계획과, 무장유격대 침투, 지방유격대 활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자 했다. 그러나 도시폭동은 상당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군사부책임자였던 이종업의 체포, 서울시당 책임자들의 체포 등으로 그 폭동계획은 계속 「5월 해방」, 「6월해방」 식으로 다음 달로 연기되었다. 폭동을 위해 서울시당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8월과 9월에도 도시폭동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나, 폭동책임을 맡았던 서울시당 간부인 양한모가 '9월 공세' 예정일로 정한 9월 20일의 4일 전인 9월 16일 남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준비했던 6천개의 수류탄과 기타 무기는 노획당하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과거 간부들의 전향에 의해 남노당 전체의 80%의 비중과 권력을 갖고 있었고 조직력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울시당이 파괴된 것은 심각한 일이었다.<sup>31)</sup> 지방유격대의 활동은 매달 그 규모가 증대되었고 400~500명 단위의 대규모 유격대를 동원해 직접 지서, 경찰서 등을 공격하고 소각하는 방식의 '아성공격(牙城攻擊)'의 형태를 띠었다. 남노당의 선전책임자들은 그 활동성공과를 과장했지만, 사실상 토벌대에 의한 당원과 유격대의 손실도 대단히 많았다. 이승엽은 남한빨치산들이 매달 연인원 수만명씩 습격작전에 가담했다

30) 『소련극비외교문서(3)』, 『소련극비외교문서(4)』 여러 곳 참조. 그렇지만 박헌영은 전쟁 발발이전까지 남한 빨치산 활동에 의한 남한체제 전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1) 양한모, 「남노당」,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219~225쪽.

고 선전했지만, 소련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실제 작전에 참가했던 빨치산 인원은 천여명을 크게 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sup>32)</sup> 1949년 9월에 박헌영이 소련대사관 툰킨 공사에게 밝힌 바에 의하면 남한에 약 1,500~2,000명의 유격대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툰킨은 그 정도의 규모로는 남한의 내부 교란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33)</sup> 그러나 박헌영은 1949년 6월부터 남파한 남도부(하준수), 이호제, 김달삼 유격대가 태백산 지역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기존의 유격대 거점인 지리산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는데 희망을 걸었다.<sup>34)</sup>

박헌영의 무장봉기에 의한 통일전략은 인민유격대를 광범하게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남한정부의 보루인 관공서와 경찰서, 지서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남한 정부의 권위를 실추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못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남노당 조직 와해전술과 토벌작전에 의해 많은 역량이 상실되었다. 1949년 9월 이승엽이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들을 남파해 이호제의 제1병단이 태백산 지역, 이현상의 제2병단이 지리산 지역, 김달삼의 제3병단이 경남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격구를 편성했지만 남한의 경찰과 군으로 편성된 토벌대에 의해 많은 손실을 입었다. 유격대는 자체 생존을 위해 농민들의 식량을 빼앗아 생존을 모색해야 했고, 그것은 농민들로부터 진정한 지지를 얻기 어렵게

32)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194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의 경우 습격작전에 가담한 남한 빨치산 수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1949년 말 현재 남한의 빨치산 숫자는 3,650명이지만, 그중 무장한 인원은 1,080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4월	6월	8월	10월
전투가담 빨치산 연인원	16,257	23,037	44,262	89,924
전투가담 빨치산 실인원	482	596	759	1,330

\* 출처: Viktor Alekseevich Bukhtoiarov, "Uchastie kontingenta sovetskikh voisk v Koreskoi voine: Istoriko-politicheski analiz(iiun' 1950-iiul' 1953 gg.)", Dissertatsiia na soiskanie uchenoi stepeni kandidata istoricheskikh nauk, Gumanitarnaia Ordendov Lenina I Okiabr'skoi Revoliutsii Krasnoznameniia Vooruzhennykh Sil Rossiiskoi Federatsii (Moskva, 1994 g.), p.25. 문서고 출처는 AVP RF, Fond 1 Dvo, Opis 6., Delo 4, Papka 19, L. 129.

33)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29쪽.

34) 김남식, 『남노당연구』, 420쪽.

했다. 물론 경찰이나 토벌대 역시 농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을 지우기는 마찬가지였다. 남노당은 단련된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원을 남파함으로써 토벌작전에 의한 손실을 메우는 정도에 머물렀을 뿐, 유격대의 급격한 확대는 피할 수 없었다. 중국혁명에서와 같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격대에 가담하는 경우는 적었다. 이른바 '아성공격'은 유격대의 존재함을 과시하는 상징적 가치는 컸는지 모르지만, 적의 정면에 부딪혀 많은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자기 역량을 보존할 수 없는 무모한 전술이었다.<sup>35)</sup>

무력에 의한 통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김일성은 1949년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소한 제한적인 개성 및 웅진반도 공격 또는 전면 무력 공격안을 승인해줄 것을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스탈린에 의해 제지되었다. 1949년 10월 4일 스탈린이 당장 무력통일은 불가하며 군비증강에 노력하고, 남한에서 유격전에 의한 내부 교란을 꾀하는데 힘쓰라는 소련공산당의 결정서를 슈티코프를 통해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읽어 주었을 때, 박헌영은 이에 고무되었고, 이미 남한에서 시행하고 있던 '아성공격', 즉 남한 경찰서와 지서, 관공서에 대한 정면 타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김일성도 1949년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 석상에서 "만일 남조선 인민들이 다 일어나 리승만을 추종하던 「국방군」이 대량적으로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때에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자기지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sup>36)</sup> 남한에서의 무장봉기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다. 스탈린의 전쟁 승인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북한은 정규군 작전을 위한 군비증강을 계속했고, 남노당 세력에 의한 남한 유격대 활동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35) 위의 책, 423쪽. 브루스 커밍스는 1948년 말과 1949년 봄부터 가을까지의 남한에서 유격대의 활발한 활동과 대한민국정부의 토벌 활동을 대비하면서 1950년 봄에도 유격대가 건재했다고 평가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Ch. 8. 1949년 말부터 1950년 초의 유격대의 위축에 관해서는, 정병준, 『한국전쟁』, 471~475쪽.

36) 리문일, 「일층 치열해진 남반부 인민유격대 활동과 높아가는 「국방군」의 의거기세」, 『로동자』 1949년 11월호, 59쪽에서 재인용.

### 3. 인민 동원

1948년 남북의 두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 북한 지도부는 북한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지상과업으로 설정했지만, 이러한 통일의 절박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1948년 말 북조선노동당의 핵심 인물들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반해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민족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심했다. 김일성은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당, 내무기관, 정치보위부의 보고를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949년 9월 12일 소련대사관의 고문 툰킨의 '만약 북한이 먼저 남한을 선제공격할 경우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일성은 "민중들에게는 북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들은 유리하지 않은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sup>37)</sup>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 노동당은 이미 1946년부터 써왔던 주제, 즉 북한이 소련의 지원 하에서 얼마나 훌륭한 민주개혁을 이루었는가, 이에 반해 미국의 지배하의 남한은 얼마나 살기가 곤란한가 등의 문제를 계속 제시하면서, 새로운 선전 주제들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여순 폭동사건에서 남한정부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애국자(=노동당원)' 및 양민들을 학살했는가, 제주도에서 남한의 단선 반대에 참가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했는가 등의 주제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호전성을 선전하는 소련의 '평화공세' 노선을 추종하면서, 유럽에서 소련이 조직한 세계평화옹호 대회에 동참하면서 소련과 북한이야말로 평화세력이며, 미국은 남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남한 지도층은 미제국주의 세력을 어떻게든 한반도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다는 선전을 통해 북한에 의한 통일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37) 「툰킨이 소련외무성에 보낸 전문」(1949년 9월 14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29쪽.

북한이 정부를 세운 직후에는 아직 전쟁 문제가 노동당의 중요한 의제로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북조선 노동당은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큰 기대를 걸면서, 남한에 대한 비난을 선전의 주요 주제로 삼고자 했다. 이것은 1948년 9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 부위원장 허가이가 읽은 연설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이 연설에서 로동계급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미제국주의 및 남한 반동에 대한 비난 선전을 강화하는 것을 당 사업의 두 과제로 삼았다. 당을 책임지고 있던 허가이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폭로와 남한정권의 고립을 위해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과만 통일전선정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단독괴뢰정부를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중간정당들과 심지어 우익정당들과 사회단체들까지도 행동통일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남조선 동포들속에서 남북로동당의 로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로선을 선전하며 남조선 반동괴뢰정부와 미제국주의자들의 조국침략정책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는 광범한 선전사업들을 전개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38)</sup> 이것이 당의 중심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선전 방침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과 사회단체의 기관지들에는 남한에서 빨찌산 운동의 ‘영웅적 투쟁’ 성과와 남한사회의 혼란상, ‘새로운 전쟁의 도발자’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몇몇 남한 출신 노동당원들은 남한의 유격투쟁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며 남한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는가를 여러 저널에 기고하고, 남조선의 ‘인민유격투쟁’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sup>39)</sup>

38) 허가이,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진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선거 총화와 당단체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 『근로자』 1948년 9월호, 34~36쪽.

39) 승민,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1949년 11호(6월 15일), 31~48쪽; 김광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투쟁에 총력기한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근로자』, 1949년 2호(1월 15일); 리승엽, 「반동의 지반을 소탕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자」, 『근로자』 1949년 제19호(10월 15일); 한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기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승리하고 있다」, 『농민』 1949년 10월호; 조일수, 「리승만 매국도당을 소탕하기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무장투쟁」, 『농민』, 1949년 11월호; 리문일, 「일층 치렬해진 남반부 인민유격대 활동과 높아가는 「국방군」의 의거기세」, 『로동자』 1949년 11월호; 안소주, 「남반부 빨찌산은 인민의 원수들을 소탕하면서 용감히 전진한다」, 『청년생활』, 1950년 4월호.

김일성이 1949년 3월 스탈린으로부터 '통일 전쟁은 시기상조이며, 북한은 군사적인 면에서 아직 남한에 대해 우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다만 남한이 먼저 공격을 해올 경우 반격의 형태로 시행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온 이후부터, 북한지도부는 한편으로는 실제로 군비 증강을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이야말로 북한을 침공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선전 주제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의 군비증강 노력을 정당화하고, 주민들을 군비증강 노력에 호응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북한 주도의 통일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악선전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자 했다.

북한 노동당은 군비증강과 팽창주의 외교를 시행하며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소련이 세계평화옹호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평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노동당의 지도적 논객들은 북조선이야말로 평화를 옹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팽창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인 남한 반동을 투쟁을 통해 격멸하는 것이 조국의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인민들에게 설명했다.<sup>40)</sup> 달리 말하면, 노동당의 빨치산 투쟁을 지원하여 남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평화적' 통일이라는 논리였다.

1949년 2월 이후로는 남한 대통령 이승만과 3월에 국방장관에 취임한 신성모가 공개적으로 '실지회복'과 '북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1949년 초부터 38선에서 남한 경찰이 주도하는 소규모 침투작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남조선의 내전 도발 의도'로 선전할 좋은 주제로 삼았다.<sup>41)</sup> 1948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동정치학원에서

40)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7호(4월 15일), 3~8쪽; 리태준, 「세계평화 옹호를 위한 투쟁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치된다」, 『로동자』 1949년 5월호: 한철야, 「항구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19호(10월 15일).

41) 정병준, 『한국전쟁』, 269, 291쪽.

훈련받은 유격대원이 38선을 넘어 월경해 오대산, 태백산맥 등에서 유격전을 펴는 것에 대해 남한 당국도 맞불을 놓은 셈이지만, 북한측으로서는 남한의 행동에 대해 그 배경은 생략한 채 '도발해왔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선전 방침을 굳게 지켰다. 남북간의 38선 충돌은 선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에 도발 책임이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든 충돌사건에 대해 그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물론 이 점은 남한측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북한 당국은 그 선전 자료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고, 사실에 관해서도 선전 목적에 맞게 그를 왜곡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한 예를 들자면 트루먼 정부하의 미국 '군사예산' 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당기관지 『근로자』에서는 미국의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의 76%에 이른다는 터무니없는 데이터가 미국의 '군비증강'의 증거로 제시되었다.<sup>42)</sup> 북한의 선전물들은 남한 인민유격대의 교전 횟수나 전과는 과장해 발표하면서도 그들의 희생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결코 밝히지 않았다. 수십 개의 군과 면에서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해 불태우는 유격대의 영웅적인 활약을 과장하는 이 선전물들이 풍기는 뉘앙스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남한 정권이 존립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외부세계의 소식이 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에서 일반 당원이나 인민들은 그러한 북한 당국의 선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었다.

1949년 초의 북한의 선전이 주로 인민들에 대한 정치사상적 동원에 머물렀다면 이 해 5월 이후부터 북한지도부의 조치는 선전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경제적, 군사적 동원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1949년 5~7월 동안에 벌어진 남북간의 연대급 38선 충돌의 격화와 관련이 있었다. 1949년 5월초부터 송악산 전투, 동해안 고산봉 전투, 이에 대한 남한측의 보복으로서 남한 유격부대인 호림부대가 양양까지 진출했던

42)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근로자』 1949년 제7호(4월 15일), 4쪽.

양양돌입사건 등<sup>43)</sup>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전투에서 북한측의 승리를 열심히 선전하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이 군대의 수적인 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5월초 김일(金一)과 모택동의 북경회담의 결과로 중국에서 들어올 2개 조선족 사단 병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김일성, 박헌영,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한편으로는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반격할 수 있는 위치로 후방의 사단들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상 결과 중국에서 조선족 사단들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했다. 북한은 이 시기에 전쟁을 대비해 인민군을 강화하고, 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는, 공개적인 것으로 5월 9일에 내각결정 제45호로 인민군 및 경비대 근무 하사관과 전사들의 가족들에 대해 15~30%까지 현물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sup>44)</sup> 이것은

43) 이 사건들에 대한 가장 세밀한 연구로는, 정병준, 『한국전쟁』, 333~381쪽 참조. 이 대대급-연대급 국경충돌사건들은 5월 4일 이른바 5·4 개성 송악산 292고지전투를 시발점으로 쌍방이 보복적 공격들을 가하는 연쇄반응식 사건들이었다. 정병준은 미국자료 등을 이용해 연대급 첫 전투라 할 수 있는 5·4전투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남한측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1사단장 김석원에 의한 도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345쪽) 한편 일찍이 38선 충돌 문제를 연구한 존 메릴도 5·4전투가 남한측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존 메릴, 신성환 옮김,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1948~1950: 한국전쟁의 국지적 배경』, 과학과 사상사, 1988, 272쪽. 그러나 5월 4일 개성 292고지 전투는 5월 3일 북한측의 선제공격에 대한 남한측의 대응공격으로 시발되었다는 기존의 국군측의 기술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이 충돌사건에 대한 북한측 관계자의 최근 증언은 이를 입증해준다. 1949년 당시 황해도 정치보위부 간부로서 전투 당시 최현의 지휘소에 있었으며 후에 남한에 남파되어 비전향장기수가 되었던 김석형은 이 충돌사건의 발단이 소련군이 철수하고 없는 가운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북한 제3경비여단장 최현이 과거 남한측의 간헐적 소규모 침투에 본때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투경험이 없고 용감성이 부족한 예하 대대장들을 길들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자 김일성이 바로 최현을 평양으로 호출해 크게 꾸짖었다고 한다. 그의 증언 내용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른바 292고지 전투 상황과 부합한다. 김석형 구술, 이향규 녹취·정리,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요!』, 선인, 2001, 268~271쪽.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45호: 조선인민군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1949년 5월 9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자료집 21: 내각공보-1948~49』, 443~445쪽.

4월말에 김일성, 박헌영, 슈티코프가 인민군 증강을 위해 일시에 16,000명의 신병을 초모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인민군에 지원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sup>45)</sup> 두 번째는, 6월 중순에 18세부터 30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성들에 대해 ‘국민 체력검사’라는 명목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인민위원회가 공민증에 그 결과를 기입하게 한 조치로<sup>46)</sup>,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대사 슈티코프와 협의하에 남한에 대한 ‘평화통일’ 공세를 취함으로써 통일문제에 있어서 명분을 쌓는 한편,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조기에 남한과의 전면전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북한은 1949년 6월말에 남북노동당을 합당하면서 동시에 남한의 진보세력을 통합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좌익을 집결시키는 한편, 그 이름으로 남한에 ‘평화통일’ 제의를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sup>47)</sup> 북한의 모든 외교문제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던 소련 외무성은 6월말에 남북조선노동당 주도로 남북한의 좌파세력을 통합하여 남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구상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안에 대해 동의해주었고, 북한은 허헌이 위원장을 맡는 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한의 좌익과 중간과 62개 정당대표들을 평양에 집결시켰다. 이들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회의를 통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한 뒤, ‘남한에서 전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남한에서 제주도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운동 탄압에 가담했던 경찰대와 「국방군」 부대들’을 해산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남북한이 선거위원회를 결성하고, 9월에 선거를 시행해 「조선공화

45)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49년 5월 1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4)』, 18쪽.

46) 홍남시 내무서장 신상일, 「홍남공비 제55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 보장의 건, (1949년 6월 12일).

47) Alexandre Mansourov, “Communist War Coal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7), pp.129~132.

국」을 수립하자는 제안서를 29일 남한측 국회와 각 국회의원들에게 특별우편을 보냈다.<sup>48)</sup> 남한정부측에서 이 통일안에 대해 호응할 리 없었다. 그러나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통일방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그것이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당시의 일시적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시간을 버는 동시에, '평화통일' 주창자로서 북한의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한 이 제안은 본래의 이중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지도부가 1949년 7월 이후부터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된 데에는 그들이 5~7월의 38선 충돌 전투들을 계기로 남한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함을 확신하게 된 것과, 7월에 중국에서 조선측 2개 사단(제164사단, 제166사단)이 귀국하여 북한 전투력이 강해진 것과 관련이 있었다. 남한에 대한 군사력의 우위를 확신한 북한지도부는 38선 충돌을 모두 '동족상잔의 내전을 획책하는' 남한측의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민들에 대한 실질적 동원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군사적 방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북한은 이해 7월 15일에 '조국보위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 달 내에 각 직장과 지역 행정 단위에서 초급단체 결성이 완료되어 '수백만'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고, 9월 15일에는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가 결성됨으로써 인민군 원호사업, 군사훈련, 군사기금 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탄생했다.<sup>49)</sup> 이때 구성된 조국보위후원회는 모든 행정단위와 주요 직장에 하나씩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주요 임무는 (1) 인민군에 대한 정신적 후원, (2) 인민군 소속 전사 및 하사관들의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 (3) 초보적인 자체 군사훈련, (4) 땀크 및 함선 수입을 위한 기금('땀크 함선 기금') 마련 등 전 인민들의 동원을 책임

48) 『조선중앙년감: 1950년도판』, 86~93, 716쪽.

49) 박정애, 「조국보위후원회 기관지 창간을 축하함」; 현정민, 「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위하여”의 발간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국보위를 위하여』(창간호, 1949년 10월), 29~32쪽; 『조선중앙년감: 1950년도판』, 266쪽.

지는 것이었다.<sup>50)</sup> 노동당과 내각은 당과 정부의 채널을 통해 조국보위후원회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청, 여맹, 농맹 등 모든 사회단체들이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 노획문서에 의하면 도시에서는 1949년 7월 조국보위후원회 결성 시점부터 각 직장에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 결성식을 갖고 직장의 회원들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이 취지에 호응한다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의 경우, 회원들은 매월 원고료의 20%를 헌납하기로 결정하고 훈련대를 조직하는 한편, 동계훈련 제1단계 훈련에 참가하자고 결의했다.<sup>51)</sup> 농촌에는 이해 9월부터 노동당 조직과 민청 조직을 통해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을 독려하는 지시가 내려갔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일부 직장의 열성자들과는 달리 그 성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2)</sup>

조국보위후원회는 38선 초소에 대한 방문, 인민군에 대한 위문품 모집을 맡는 동시에, 각급 지부에서 주로 민청단체를 통해 16세부터 30세까지의 젊은이 모두를 '훈련대'를 편성해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마을 단위에서는 이미 편성된 '자위대'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과학과 기술'을 연구하도록 했다.<sup>53)</sup> 조국보위후원회가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크게 의존한 것은 당연히 북한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속한 민청조직이었다. 민청단체에서는 젊

50) 조국보위후원회의 강령에는 '국토를 보위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후방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949년 10월에는 곧 '비행기 땅크 헌납 운동'이 이 후원회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 강령」(초안), 『조국보위를 위하여』(창간호, 1949년 10월);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총회 회의록」(1949년 10월 5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1)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총회 결정서」(1949년 10월 5일);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쉼기대회 보고서」(1949년 11월 3일);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제3차총회 회의록」(날짜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2) 「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년 9월 13일); 「북조선로동당 인제군 민청당조 회의록(50차)」(1949년 12월 20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이 문서들을 보면 당간부들은 농촌지역에서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이 민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과 '회사운동'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3) 이는 노동당 인제군당 기록에서 확인된다. 「북조선로동당 강원도당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년 9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은이들 중 아직까지 민청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민청에 가입하게 하는 운동을 벌였다. 또한 그들은 청년들 중에서 많은 인원들이 인민군에 자원하도록 고무했다. 조국보위후원회가 결성된 1949년 7월 무렵부터 북한의 선전 주제에는 기존의 레퍼토리 외에 '조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조선청년의 최대의 영예이다', '인민군대의 강화는 조국통일을 보장한다'는 내용들이 추가되었다.<sup>54)</sup>

조국보위후원회가 북한 주민의 내부적 동원에 주력했다면 1949년 6월말에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 대해 통일의 당위성, 남한체제의 사악성, 북한의 군비증강 필요성, 유엔한국위원단의 불법성을 역설하는 역할을 맡았다. 1949년 9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대표자들을 결성하여 38선 연선을 시찰해 남북간 충돌 현장을 조사하고 10월 15일 그 결과를 신문에 발표했다. 그들은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432회에 걸쳐 남한의 38선 이북 침범사실이 있었으며, 그 모두는 남한측의 일방적 공격의 결과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그들은 남한의 '평화적 인민학살', '유엔조선위원회'의 친미도구화, 반동정부를 강화하는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sup>55)</sup> 남한의 국군측은 11월에 1949년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북한이 563회에 걸쳐 38선 이남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나<sup>56)</sup>, 이러한 내용을 북한이 언론에 보도할 리는 만무했다.

북한지도부는 당조직과 사회단체를 통해 주민의 정치적 동원을 진행하는

54) 김용국, 「인민군대의 강화는 조국통일을 보장한다」, 『산업』 1949년 9월호; 김두천,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조선청년의 최대의 영예다」, 『로동자』 1949년 7월호; 오학균, 「조선 인민군대는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승리의 담보이다」, 『농민』 1949년 10월호. 마지막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그러한 논리를 폈다. "원수들은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놈들은 어떻게 하여서든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동족상쟁의 전쟁 방법으로 놈들의 반동괴뢰정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앞에 우리 인민의 무장력을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놈들의 동족상쟁 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하고 적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쪽)

55) 「38선선무장충돌조사결과에 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사위원회 보고서」, 『노력자』 1949년 10월 15일자.

56) 정병준, 『한국전쟁』, 261쪽.

동시에 내각조직을 통해 전시 동원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시켰다. 내각의 내무성은 예하 내무서들에게 1949년 6월부터 은밀히 전체 국민의 '군사등록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비밀로 분류된 공문들이 그 내용을 잘 보여준다. 북한 내무성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민총동원을 대비하기 위해 각급 내무서에 18세부터 30세까지의 모든 남자들이 빠짐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공민증 특기란에 명시하도록 지시했다. 31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신체검사는 면제되었지만 군사등록의 대상이었다. 이 신체검사는 '전국민 체력검사'로 위장해 실시했다. 노획된 홍남시 내무서 비밀문서를 통해 보면 내무성은 신체검사 누락자와 군사등록 누락자가 없도록 6월부터 9월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sup>57)</sup> 각급 내무서 군사등록계장은 전체 대상자의 개인별 등록카드와 신체검사표를 만들어 개인별 신상, 부양가족, 38이남 및 외국 거주 가족란을 기입해 보관했다.<sup>58)</sup> 내무서에 대한 지시에서 계속 '기밀'을 강조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러한 조치들이 새어나가지 않을 수는 없었다. 남한당국과 미 군사고문단은 그들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이 전 국민을 '징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징집은 아니었지만, 전쟁을 예상해 전 국민의 의무적 동원체제를 확립한 것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선전 및 군사적 동원체제 구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인지시키고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다. 노동당원들은 북한의 '군사동원'에 호응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선전했다. 그러나 일반

57) 홍남시 내무서장 신상일, 「홍남공비 제55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 보장의 건」(1949년 6월 12일); 「홍남시서 제7호 각분서 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에 대한 지시」(1949년 7월 6일); 「홍남시서 제7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사업에 관한 지시」(1949년 7월 6일); 「홍내군 제29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등록계 기요사업에 대한 지시」(1949년 7월 22일); 홍남시 내무서장 김한구, 「홍내군비 제96호 각분서파출소장 앞: 군사적령자미등록자 등록사업에 대하여」(1949년 9월 12일). 마지막 자료에 의하면 여자 중 등록대상은 교환수, 간호원, 타자수 및 기타 기능자 기술자만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58) NARA, RG 242, Shipping Advice 2010, Box 1, Item 152. 「등록카드」, 「신체검사표」.

주민의 동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은 두 부류였다. 일부는 남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전쟁을 해서라도 남한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연백군 중농 가정의 한 농민은 “평화적 통일방책이 승리하지 못할 것은 환한 일이다. 언제든지 통일은 무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일부는 전쟁을 두려워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했다. 그들은 “지금 평양에서는 인민군들이, 낮에는 청년들이 도망 다니기 때문에 밤에 다니면서 청년들 보고 인민군대에 가라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불안해했다. 선전전을 위해 남한이 비행기를 이용해 뿌린 반복한 체제적 남한 뼈라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표시했고, 일부는 무관심했으며, 일부는 북한이 선전뼈라를 뿌리는 미국 비행기를 그냥 놔두는 것을 북한의 허약함의 징표로 보았다.<sup>59)</sup>

한편으로 경찰의 억압 등 사회통제에 기초한 동원체제는 북한의 공산주의체제와 통일을 목표로 한 무장력 강화시책에 대해 반발하는 상당수의 체제 불만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박명림은 북한정권에 의해 반동, 무장폭동, 결사, 선전, 테러 등으로 중형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검토해 그 숫자가 적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다만 지주나 부유층만이 반체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며 전 사회계층에 고루 퍼져있었음을 확인했다.<sup>60)</sup>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의 1949년 연례보고서는 박명림이 제시한 것보다 더 포괄적인 통계를 드러낸다. 소련대사관에 제출된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부의 통계에 의하면, 1949년 한 해 동안 반체제 혹은 반정부 사건 등 정치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5,762명(1,279건)에 달했다. 이 중 1,233명(146건)은 테러사건, 816명(48건)은 무장반란, 662명(77건)은 후방교란, 92명(50건)은 반역죄로 검거되었다. 1,624명은 반체제적 선동의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692명은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과의 연루로 인해 체포되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반체제 운동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5,762명을 ‘사회성분’으로 나누

59)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842~846쪽.

60) 위의 책, 846~849쪽.

어보면 다음과 같다: 빈농 1,269명(22%), 소토지소유농 1,033명(19%), 중농 675명(12%), 상인 및 투기꾼 501명(9%), 자영업자 489명(8%), 노동자 388명(6%), 부농 75명(1%), 지주 41명(1%), 수공업자 38명(1%).<sup>61)</sup> 1949년 7월에 슈티코프 소련대사는 194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정치범 통계숫자가 1948년 1년간의 정치범 검거 수자와 거의 맞먹는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은 소련군 철수 후 '우익반동'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과 남한측이 반동인원을 북한에 침투시켜 테러와 후방교란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sup>62)</sup>

슈티코프의 분석은 옳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그러한 사건들보다는 약하지만 사회전반에 깔린 체제불만자들의 분위기를 다 말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적극적 반체제 행동가들 외에도 1948년 북한정부 수립 이후 전쟁준비에 모든 것을 건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온건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소 교포 과학자 장학수는 소련유학생으로 뽑혀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1950년 3월에 노동당원이었던 그의 형으로부터 북한정권이 인민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고 당원들을 당의 노예로 만들며 군국주의 방식으로 남한을 통일하기 위해 조직적인 군사훈련과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환멸을 느꼈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형은 노동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sup>63)</sup> 전쟁준비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하는 북한의 관료적이고 하향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았지만 실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61) AVP RF Fond 1 Dvo, Opis 6, Papka 9, Delo 4, Ll. 70~71.

6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41~42쪽. 1949년 정치범 숫자 5,762명은 그 전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1946년에는 90명, 1947년에 1,289명, 1948년에 1,792명이었다.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의 과거청산(1945~1948)」, 『대구사학』 제69호(2002년), 16쪽.

63) 장학수, 『붉은별 아래 청춘을 묻고』, 문학사상사, 1990, 165~166쪽.

#### 4. 전쟁 무기·물자의 생산과 수입

해방 후 군대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군대를 창설해야 했던 북한으로서는 무장에 관한 한 거의 대부분 소련의 호의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1946년 7월부터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의 재산 및 공장들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관할 하에 넘어가게 되자 북한은 비록 소련 군정의 후견 아래였지만 자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이미 국가 권력의 장악력을 확실하게 갖춘 김일성의 군사적 관심은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은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무기 부족으로 고생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무기의 자체 생산 능력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자체 무기생산 능력을 갖고자 하는 김일성의 열망이 컸다할지라도 북한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은 낮은 것이었다. 복잡한 기계 생산 능력을 갖지 못한 북한에서 시도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었다. 1947년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그해 9월 김일성의 지시로 시행된 기관단총과 권총 생산시설의 착공이었다. 그 생산라인은 평양의 동쪽인 성천(成川)에 지어진 '평양기계제작소'에 설치되었고, 후에 확장되어 제65호 공장(병기공장)으로 불렸다. 1948년 12월 12일에는 처음으로 기관단총 국가시험 사격행사가 열렸다. 제65호 공장은 1949년 2월에는 박격포, 소총탄, 수류탄, 박격포탄 생산을 위한 생산 규모 확장공사에 들어갔다. 같은 해 10월 31일 김일성은 제65호 병기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대표자들에게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북한은 기관단총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sup>64)</sup> 이 공장의 명칭은 처음에는 '평양기계제작소'라는 명칭을 썼으나, 1949년 6월 18일부터는 3월 1일자로

64)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제5권, 297~301쪽.

소급해 산업성 제65호 공장으로 바뀌었다.<sup>65)</sup> 1949년 3월에 소련과 맺은 비밀군사협정에 의해 이 생산시설이 급격히 소련식 생산공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고, 대형화되는 무기공장의 보안을 위해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1949년 6월에 발행된 한 공문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제65호 공장 종업원들에게는 공민증을 일시 회수보관하고 특별신분증을 휴대하도록 했다.<sup>66)</sup>

이 공장은 시설부터 기술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기계들은 모두 소련에서 도입한 자동화된 생산시설이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전쟁 전에 북한에 기술지원을 위해 파견된 110명의 소련 기술고문 중 이 공장에서만 55명의 소련군 병기기술자들이 일했다. 1950년 2월까지의 모든 시설들이 양산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월 1일 현재 82mm 박격포는 170문, 그리고 수류탄(F-1형) 19,684발이 생산되었다. 그 외에도 이 공장에는 120mm 박격포 생산라인, PPSH 기관단총(속칭 따발총) 생산라인, 탄알생산 라인, 박격포탄 생산라인이 갖추어져 있었다.<sup>67)</sup> 이 공장은 1950년 9월 현재 3,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병기공장은 어떤 돈으로 지어졌는가? 소련의 자료는 이러한 공장 생산 시설은 다른 산업 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 측으로부터의 유상 차관에 의해 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 병기공장을 구축할 때의 그 비용에 대한 소련과 북한간의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1949년 3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맺어진 경제차관 협정에는 군수공장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책정되어 있었다.<sup>68)</sup> 소련과의 무역에서 '기

65) 산업성 제65호공장, 『통지』(1949년 3월 18일). 이 문서의 내용은 3월 1일부로 종전의 '평양기계제작소'를 '산업성 제65호공장'으로 바꾸며, 공장지배인 직인은 3월 17일자로 새 직인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66) [내무성] 부상 겸 보안국장 박용삼, 보안처장 주치옥, 『내성보보공비 제220호 평특시 및 각도내무부장 앞: 65호 공장 종업원 신분증 소지에 관하여』(1949년 6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67) Bukhtoiarov, "Uchastie...", p.31. 원 사료 출처는, AVP RF, Fond 1 DVO, Opis 6, Delo 5, Papka 18, L. 140.

68)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3)』, 13~15쪽.

계공업 설비'에는 민간 산업기계뿐만 아니라 무기생산에 필요한 플란트와 관련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련자료에 의하면 1949년 한 해 동안 경제건설을 위해 총 30억 4,000만원의 차관이 들어왔는데, 그중 4억 5,000만 원은 군수산업 건설에 사용되었다.<sup>69)</sup> 이 액수는 예산에 '경제비'로 계상되었겠지만, 사실상 은폐된 군사비의 일부였다. 아마도 그것은 주로 위에 언급한 제65호 병기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날로 확장되는 조선인민군의 무장과 부대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군사예산은 1949년부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으로 엄청나게 증액되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1949년 예산 중 조국보위비(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8%로 발표하였으나, 소련대사관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이해의 실제 북한군사비가 전체 예산의 52%인 103억 8,460만원이었다.<sup>70)</sup> 북한이 『조선중앙년감』에 '조국보위비'라고 공표한 군사비는 사실은 전체 군사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정도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조선중앙년감』에 공개된 1949년도 북한 예산에서 총 세출은 197억 2,600만원으로, 그중에서 '조국보위비(국방비)'는 31억원이 배당되어 전체 예산 지출의 15.8%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표되었다. 한편 '국가운영비'는 36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 지출의 18.2%에 해당되었다.<sup>71)</sup> 소련대사관 자료에 나타난 북한 군사비 총액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공표한 예산에서 '조국보위비'는 다만 군의 운영비에 해당하고, '국가운영비'의 대부분이 군사비로 사용되었으며, 경제건설 중에 포함한 군수산업 시설 투자비용 역시 '경제비'로 계상되어 은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액수를 모두 합한다면 어떤 명목으로든 공식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 군사비(조국보위비+국가운영비+경제차관 중 군사시설비)는 71억 7,2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소련 자료에 나타나는 103억 8500만원에서 이 액수를 뺀 32억 1,000만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69) Bukhtoiarov, "Uchastie..." pp.30~31. 원 자료 출처는, AVP RF, Fond I DVO, Opis 6, Delo 5, Papka 18, L. 91.

70) Ibid., p. 31. 원 자료 출처는, AVP RF, Fond I DVO, Opis 6, Delo 5, Papka 18, Ll. 89~91.

71) 『조선중앙연감: 1950』, 66~67쪽.

일부 액수는 1949년 3월 17일에 모스크바에서 맺어진 '비밀군사협정'에 의한 무기구매 차관에 의해서 지불되었다. 그것은 2억 1,200만 루블(약 8억 5천만원) 규모로 1949년, 1950년, 1951년에 7,070만 루블로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나 1949년 말에서 1950년 초 북한의 갑작스런 군비확장 때문에 1951년 2월까지의 이 모든 차관들을 앞당겨 끌어 써야 했다.<sup>72)</sup> 일부 액수는 북한이 물물교환의 형태로 무기를 구매한 것이었다. 북한은 1949년 11월부터 50년 2월 사이에 새로운 무기와 탄약을 구매하기 위해 약 5억원(1억 2,000만 루블) 상당의 돈을 쌀과 금, 은, 동, 기타 희귀금속으로 갚기로 했다.<sup>73)</sup> 김일성은 이 무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950년 2월과 3월에 희귀금속 탄광노동자들에게 특배를 주면서 생산의욕을 고취했고,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에 노동자들에게 연설함으로써 생산을 고무했다.

일부 액수는 조국보위후원회가 인민들에게 호소해서 모은 '군기헌납기금'에 의해서 충당되었을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949년 11월 2일 비행기, 탱크를 인민의 힘으로 구입해 인민군에게 헌납할 것을 결정하고 '군기기금'을 모금하는 운동을 펼쳤다. 헌납은 도시에서는 주로 현금, 농촌에서는 쌀을 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1949년 12월말 현재 2억 8천여만원의 현금, 48,000가마의 쌀이 거두어졌다.<sup>74)</sup> 이 운동은 1950년 봄까지 지속되어 1950년 3월 26일까지 누적 액수로 3억 4,223만원과 쌀 77,600가마(4,656톤에 상당)가 모아졌다.<sup>75)</sup> 북한 정부는 '군기 헌납 운동'을 통해 일부의 무기 구매 대금과 군량미를 마련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이 무기구매 대금 중 약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쌀과 금, 은, 동 및 희귀금속에 의한 지불에 의해, 그리고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민들로부터 모은 '군기기금'에

72) 『평양의 스티코프대사가 외무상 비신스키에게』(1950년 2월 7일): 『비신스키가 스티코프에게』(1950년 2월 9일):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년 3월 9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극비외교문서 (4)』, 46~47, 49쪽.

73) 『스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1950년 3월 9일), 위의 사료집, 49쪽.

74)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년도판』, 166쪽: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780~781쪽.

75) Bukhtoiarov, "Uchastie...", p.30. 원 사료 출처는, AVP RF, Fond 1 DVO, Opis 10, Delo 8, Papka 11, L. 77.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대사관 연례보고서는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무기를 구매하는데 “예산 이외에 북한은 23억 6천만원이 부족했다”고 쓰고 있는데<sup>76)</sup>, 이 금액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32억원 중에서 현물, 군기기금에 의해 마련한 8억원을 빼고 남은 액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민들에 대한 호소에 의해서 모은 ‘군기기금’으로는 마련하고자 하는 무기 구매 대금의 극히 일부분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김일성의 ‘무력에 의한 통일’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전문을 보낸 직후, 소련측은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계화 장비와 3개의 추가적인 사단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나 소련이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군비확장을 위해 소련측과 ‘국가 공채’를 발행해 군비확장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스탈린은 2월 9일에 북한의 공채 발행계획을 승인해주었다.<sup>77)</sup>

북한은 이 국채를 기채할 때 인민들에게는 그것이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속여야만 했다. 공채 발행의 의의를 선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전원들이 움직였고, 북한의 문화선전성은 경제 건설을 위해 인민들이 국가 공채를 사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팸플릿을 찍어내 선전원으로 하여금 이를 많은 인민들에게 적극 호응하도록 했다.<sup>78)</sup> 북한 정부는 ‘공화국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년의 상환기간을 설정한 국채 15억원 어치를 1950년 5월에 발행했다. 이에 대한 호응은 매우 높아서 발행 2일 후에는 13억 7천

76) Ibid.

77) 『비신스키가 스티코프 대사에게』(1950년 2월 9일), 『한국전쟁 관련 소련군비외교문서(4)』, 47쪽.

78) 북한은 국가공채의 의의를 인민들에게 선전하는데 사용할 많은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는데, 그 내용에서는 이 돈들이 일반 산업시설 확장에 사용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공화국북반부의 장엄한 인민경제건설과 공채발행의 의의-강사들에게 주는 자료』(평양, 1950); 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조선인민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국가공채를 발행할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평양, 1950).

만원 어치가 매각되었다. 7일후인 5월 22일까지는 예정 액수를 10억원 초과한 25억 473만원의 공채가 팔렸다. 25억원에 도달하자 더 이상의 국채발행을 중지했다.<sup>79)</sup> 이 공채 판매는, 일부는 처음에 현금을 내고, 일부 대금은 차후에 지불하겠다는 예약제였기 때문에 당장 모든 액수가 국가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지방의 당과 인민위원회는 이의 징수를 위해 그 후에도 인민들과 공채 미납 대금 납부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추측된다.<sup>80)</sup> 아마도 이때 공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8월에 소련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된 150대의 탱크와 120대의 항공기 및 기타의 군사 장비 구매 대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1)</sup> 결국 북한은 무기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외의 공채 발행으로 이를 해결했다.

무기는 물론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식량, 탄약, 연료의 확보 문제였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현대화된 군부대를 가진 인민군의 작전을 위해 이러한 전쟁 수행 수단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시할 문제였다. 이 면에서 북한은 무기체계의 준비에서처럼 약체인 국군을 상대해서 속전속결전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물자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썼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를 보자. 우리는 북한이 전쟁 수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군량을 확보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일성이 전쟁 중인 1951년 4월 17일 한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 전에 마련하여 놓았던 전략물자의 예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9) 공채 모금 내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국내편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3), 366~367쪽 참조.

80) 철원군 어운면 노동당부의 한 문서(절대비밀)는 처음에 공채를 예약한 것과는 달리, 그 대금 징수가 아주 미약한 것이 나타나는데, 초기에 인민들이 보인 호응은 사실상 노동당원들과 선전원들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조선로동당철원군어운면당부, 『비망록(절대비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81) 소련학자 키르쉰(Iu. Kh. Kirshin)의 자료에 입각한 다음의 논문을 참조.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14쪽.

전선부대들에 후방물자를 보장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나서지는 않았습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sup>82)</sup> 전쟁 전에 군수용 예비 식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전 인민군의 식량 준비는, 소련고문관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완벽하였다.” 평양의 중앙기지에는 30일분의 양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방 창고에는 30일분, 그리고 부대에는 5일간의 식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양식을 조달하지 않아도 18만 8천명의 인민군이 두 달간의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양이었다.<sup>83)</sup> 한편 북한 포로의 심문 결과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남한 지역 작전에서 군에 필요한 식량의 1/3을 남한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sup>84)</sup>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한의 국군과의 전쟁만을 가정할 때는 아마도 충분한 양이었을 것이다.

피복과 기타 보급품 역시 단기 작전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보급량을 갖고 있었다. 하기 피복에 있어서는 약 10%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외 취사 기구, 마구 등은 편제에 의해 전부 보급되었다.<sup>85)</sup>

유류의 공급도 전쟁의 지속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었다. 미군 정보에 의하면 전쟁전 북한은 원유를 전량 소련으로부터 수입했지만, 원산에 대규모 처리 능력을 갖는 정유공장이 있어서 군에 필요한 전체 유류의 80%를 이 정유공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었다.<sup>86)</sup> 유류도 식량의 보급체계와 유사하게 중앙창고, 전방창고, 그리고 부대 소유 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평양과 문천의 2개의 중앙 창고와 3개의 전방창고를 운용하였고,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규모는 34,600톤이었다. 항공유, 자동차유, 등유, 디젤유를 포함하여 중앙 창고들에는 약 6,000톤, 전방 창고들에는 약 1,500톤, 그리

82) 김일성, 「장기전에 대처한 후방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자」(조선인민군 후방총국장조 상학 참가자들 앞에서 한 연설, 1951년 4월 17일), 『김일성전집』 제13권, 342쪽.

83) S. S. Lototskii and N. L. Volkovskii(eds.), *Voina v Koree, 1950~1953*(Sankt-Petersburg: Poligon, 2000), p.745.

84) Charles R. Shrade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5), p.64.

85) *Voina v Koree, 1950~1953*, p.753.

86) Shrader, *Communist Logistics*, p.61.

고 각 부대에 500톤 정도를 보유하여 약 8,000톤을 확보하였다.<sup>87)</sup>

탄약의 마련은 일부 생산 가능한 박격포탄과 수류탄, 경기관총 탄약, 지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야포와 전차 포탄은 소련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해야 했다.<sup>88)</sup> 앞서 살폈듯이 소구경 화기 탄약과 박격포 포탄은 1950년 초에 비로소 양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것도 소요량의 극히 일부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쟁 전의 탄약 비축량에 대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탄약 역시 식량, 유류의 경우와 유사하게 약 60~65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예비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군은 현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유량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전쟁 전에 인민군은 전체 지프 390대, 트럭 1,113대, 포병 견인차량 863대, 특수자동차 193대를 갖고 있었다.<sup>89)</sup> 이는 사단 당 병력 혹은 물자 수송용 차량이 약 100여대에 불과한 정도로, 결국 보병사단의 병력 이동은, 철도이동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적으로 도보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기동력에는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1949년 4월 29일에 국가계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의 숫자를 파악해 보고하게 함으로써<sup>90)</sup> 전시 동원 가능한 차량을 파악해두었고, 1950년 6월 22일에는 은밀하게 내무성 시설처가 민간 차량들을 징발하여 일부 군부대에 공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군 보급부서의 운송을 지원했다.<sup>91)</sup> 그러나 민간의 보유 차량대수가 본래 적었기 때문에 인민군의 기동력을 높이는 조치는 되지 못했다.

요약컨대 북한은 실로 전쟁 준비를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전쟁 준비자금을 확보했다. 일부는 예산으로, 일부는 '군기 헌납 기금'으로, 일부는 금,

87) *Voina v Koree, 1950~1953*, pp.748~749.

88) Shrader, *Communist Logistics*, p.65.

89) *Voina v Koree 1950-1953*, p.764.

90)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정준택, 부위원장 김두삼, 「외무성 앞: 자동차조사에 관하여」(1949년 4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이 공문은 외무성 앞으로 보낸 것이지만, 공문의 내용에 각도(各道)에 소속한 예하 부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내각 부서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1) [내무성 시설처] 운수과, 「비서류철(秘書類綴)」(1950), NARA RG 242, Box 45, Document No. 200991.

은, 동 및 기타 희귀금속의 채굴에 의한 현물로 자금을 마련했다. 김일성은 예산외로 비밀군사협정에 의한 군사차관, 국가 공채 발행 등 어떤 방법이든 전쟁의 성공을 위해 매진했다. 이러한 자금을 통해 그는 소련으로부터 유상차관과 직접 구매에 의해 많은 수의 탱크, 항공기, 함정, 군용 오토바이, 고사포 및 화포를 수입했다. 특히 많은 물량이 1949년 11월, 1950년 3~4월에 비밀리에 북한에 들어왔고, 수입된 무기들은 5월말까지 모든 부대들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 5. 결 론

지금까지 논의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전쟁 전 북한 지도부는 1948년 말 이래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안과 남한 빨치산 봉기를 통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두 가지 통일방책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결국에는 양자를 적절히 배합하는 배합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은밀히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했다. 처음부터 김일성, 최용건, 강건 등 이른바 만주빨치산파들은 무력통일안을 중심으로 남노당 빨치산의 활동을 배합하고자 했고, 박헌영의 남노당 세력은 남한 빨치산 활동을 중심으로 남한체제 전복을 기도하되 북한군이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1949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 시 스탈린이 선제 무력공격에 대해 이것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며 남한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전쟁은 승인할 수 없다고 하자 김일성과 박헌영 등 북한지도부는 남한빨치산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전쟁준비를 비밀리에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1949년 한해 동안 북한지도부는 매우 은밀하게 인민동원체제를 강화해 갔으며 군비확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물자를 비축하는데 주력했다. 노획된 북한문서들과 구 소련문서를 통해 볼 때 북한지도부는 북한이 먼저 남한을 무력침공 한다고 할 경우 '인민'들이 이에 반감을 갖을 것임을 우려

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해 청년들이 인민군에 입대하거나 직장에서 군사훈련에 적극 임해야 된다고 선전함으로써 '인민'을 속여야 했다. 또한 '전국민체력검사'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동원할 대상자의 신상과약과 함께 군사등록카드를 만드는 작업을 내무서들이 담당하도록 했다. 노동당과 조국보위후원회 그리고 민청, 여맹, 농맹 등 모든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이 국가시책에 호응하도록 각종의 회합과 선전물들을 통해 선전 선동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비밀리에 전쟁 비용과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인민들을 기만했다. 특히 주목할만 한 점은 전쟁 무기들을 소련으로부터 구매하는데 필요한 국채를 주민들에게 판매하면서 그것을 '경제차관 도입을 위한 것'이라고 속였다. 뿐만 아니라 군비확장과 전쟁자금 마련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국방비는 국가예산 상 국방비 이외의 다른 항목 아래 은폐한 채 축소해 발표했다.

선전, 선동, 강제, 은폐, 기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북한의 전쟁준비는 남한과 미국의 이목을 속임으로써 인민군의 기습남침 성공에 일조했지만 인민의 기만에 입각한 그러한 전쟁준비는 전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변했을 때 많은 주민들과 상당수의 노동당원이 북한체제에 등을 돌리게 되는 부메랑이 되었다. 북한은 식량, 유류, 탄약, 피복 등 인민군이 약 2개월 정도 작전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군수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했다. 동족간 전쟁에 동원되고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많은 수의 북한 주민과 십수만의 노동당원들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체제가 급격히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북한체제에 등을 돌렸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5,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김일성, 박헌영, 동원, 군사비, 군수물자, 65호 공장, 군사차관

<ABSTRACT>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 and War  
Prepar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 From September 1948 to January 1950 -

Kim, Kwa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unifica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among chief leaders in North Korea and how preparations for war were made along lines of these discussion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So far, the main academic debates about the war have been mainly on the origins and causes of the War. Based on the Soviet archive materials partially opened in the 1990s and "the captured North Korean Documents" which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surrounding the war and have made a long debate about who was the leader in determining the War. By contrast, researches on the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s and the mobilization for the War made within North Korea have not been conducted enough. For example, how the North raised the war fund and prepared war resources and materials before the starting of the war has never been studied. Furthermore,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fication strategy discussion and the actual ideological and material mobilization have not been identified.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ll the gap in historical knowledge on these subjects, based on a variety of historical source and personal testimonies.

First of all, it should be noted that North Korea's strategy discussions

for unification was made almost simultane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declared the “complete reconstruction of the country” and “national unification” as their policy priority among the new government’s political principles, right after establishing their government in September 1948. In addition, the Labor Party determined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extension of North Korea’s system to the whole country (both Korea) to be their top priority. However, opinions of the concrete methods of unification were divided between the leading groups. The Manchurian Partisan faction including Kim Il Sung, Choi Yong-Gun, and Kang Gun insisted the unification through the Army’s invasion of the South should be put first and that the South Labor Party’s partisan activities should assist this, while the South Labor Party faction including Park Hun Young claimed the South Korean partisans should overthrow the ROK mainly through the people’s uprisings and that North Korea just aid this. During his official visit to Moscow in March 1949, Kim Il Sung suggested the unification by armed force to Stalin, but Stalin refused flatly to approve this by pointing out the unfavorabl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keeping the 38th latitude division. He mentioned that if the South attacked first, the North’s counterattack could be allowed but the North should not make a preemptive attack on the South. After this, Kim IL Sung several times urged Stalin to approve his proposal of the unification by armed force but could not get the consent before the end of January 1950. Under these circumstances, Kim Il Sung was establishing the system of mobilization secretly having a war in mind, while supporting the South Labor Party’s partisan activities.

Throughout the year 1949, the North leadership was making efforts very secretly to strengthen the mobilization system of the people and also putting time and energy on raising the fund to increase armaments and reserve war material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resumed that the people of North Korea would have aversion on them if the North Korea invaded the South Korea first. Therefore, they were to deceive the people

by propagandizing that young people should enlist in the military or be trained in the workplace to preven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rom invading the North. Also, under the name of 'the national physical fitness test,' each department at all levels of the government was in charge of identifying the population to be mobilized to a war and making the military registration card. The Labor party, the Defensive Committee for Fatherland, and all the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Democratic Youth's Union, Women's Union, and Farmers' Union gave it their best shot through various meetings and brochures to incite the people to respond to this national policy.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eceived the people to secretly accumulate funds for the war. In order to raise capital to purchase weapons of war from the Soviet Union, they sold government bonds to residents by making an excuse that the money was necessary for "loan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lso, in order to conceal their armament expansion and war fund raising, they announced only a portion of the actual defense budget as "Defense Fund for the Fatherland (National Defense Budget)" and hid the remaining funds into the other budget items. In 1949, the "Defense Fund for the Fatherland" was announced to be 3.1 billion won, 15% of the total expenditure 19.7 billion 26 million won, but the actual military spending amounted to 7.1 billion won. Besides, the money collected from the people in the name of 'donation fund for military equipments,' the loans of about 850 million won by barter from the Soviet Union, and 2.5 billion won collected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ame of national bonds were added to this military budget. Therefore, North Korea's actual military expenditure in 1949 amounted to 10 billion 384 million 600 thousand won.

At the same time, through various means, North Korea prepared enough war materials for People's Army to carry out a war for two months with no difficulty. These were partly from the loans and partly from the people's contributions in the name of 'voluntary fund for military equipment.' Thus, North Korea was able to stockpile supplies needed to sustain a short term

war for duration of 2 months, such as food, fuel, ammunition, clothing, etc. However, it ran short of provisions for a longer term war.

Key Words : the Korean War, North Korea, War Preparation, Unification Strategy, Mobilization, Military Budget, *Kim Il Sung*, *Choi Young Gun*, *Kang Gun*, *Park Hun Young*, Military Budget